중국, 북 전투기 추락에 곤혹

"방공망 뚫렸다" 비판 여론… 北도 체제 불안 노출에 함구

中 정보소식통 "단좌식으로 조종사 1명 탑승"

지난 17일 오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향에서 추락한 북한 국적 미그(MIG)-21 전투기는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는 단좌(單座)식 전투기로, 추락 당시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조종사가 계급장을 달지 않아 중국 당국이 그의 직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정보 소식통들은 19일 "추락한 북한 전투기는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는 단좌식으로, 두 명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없다"고 추가 탑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홍콩 명보(明報)와 일본 교도통신 등 일부 외신은 중국 인터넷에 떠도는 누리꾼들의 주장들을 토대로 지난 18일 추락한 북한 전투기에 두 명이 타고 있었으나 한 명은 추락 직전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했다고 보도했었다.

사고 처리문제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반관영 중국신문사는 18일 오후 중국 당국을 인용, "중국이 북측과 전투기 추락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군사소식통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의 군 관계자가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면서 북한 국적기임을 확인한 뒤 북한 당국에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은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 모두 곤혹스러운 사건인데다 사안의 민감성을 놓고 볼 때 철저한 함구령이 내려져 은밀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 전투기 추락사건과 관련, 북한기의 진입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방공망이 뚫렸다'는 비판에 직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역시 조종사의 탈북 시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체제 불안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함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 당국은 19일 오전 추락한 북한 전투기 잔해를 해체, 사고현장에서 반출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영진 의원(왼쪽)이 19일 오후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본 민주당 도이 류이치(오른쪽) 중의원 의원에게 '간 나오토 총리에게 보내는 요망서'를 전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 추가 논의하자"

한국 의원들, 日에 문서

한국 의원들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100년 담화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등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일본측에 전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한국 의원들은 19일 오후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본 민주당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중의원 의원 등에게 '간 총리에게 보내는 요망서'를 전달했다.

한국 의원들은 요망서에서 ▲일본측이 식민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이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일본측이 과거 청산에 기반해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나포 대승호' 인도적 해결 가능성

北 11일만에 나포 통보 송환 시기는 불투명

북한이 19일 우리측 오징어잡이 어선 대승호의 나포 사실을 처음 확인하면서 선원·선박 송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8일 10시15분경 우리 동해 경제수역을 침범해 어로작업을 하던 남조선 선박이 정상적인 해상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단속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승호가 나포된지 11일이 지났고 정부가 전통문으로 조기송환을 촉구한지 8일 만에 북한의 첫 반응이 나온 것이다. 불법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기 하루 전에 보도된 점도 눈길을 끈다.

우선 북한이 뒤늦게나마 나포를 확인한 것은 사태해결에 긍정적 신호로 볼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16일 시작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기간에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북한이 나포 사실을 통보한 것은 대승호 선원 7명 가운데 중국인 3명이 포함돼 있는데다 나포사실 자체에 대해 장기간 침묵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승호를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로 나포한 것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인도적 사안으로 풀어갈 의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국제사례에 비춰 대승호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데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송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남북 간 군사적 상황이 고조돼 있고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송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송환 문제를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초보적 조사'로 우리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승호 송환 문제를 장기화할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에 조기송환을 촉구하면서도 전통문을 다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대승호 선원과 선박을 조속히 송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승호 송환이 장기화할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연합뉴스

"영산강살리기 박 지사 태도 변화 필요"

이정희 민노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9일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박준영 전남지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야 5당 대표들이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해 각 정당과 자치단체장들이 연대키로 했으나 유독 전남도 입장만 정리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공동전선을 이뤄야 하는데 전남과 영산강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4대강 사업은 민주당과 차기 (당권·대권)주자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충남, 충북, 경남 뿐만 아니라 전남까지 묶어서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표로는 이기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봤다"면서 "이 같은 가능성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27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7·28 남구 보선처럼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구도를 만들 것"이라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민노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미 내달 서해서 대잠수함훈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조치 일환으로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9월 초 서해상에서 실시한다고 19일 공동 발표했다.

양국은 발표자료를 통해 "지난달에 있었던 양국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한반도 동·서해상에서 일련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9월 초 서해상에서 방어적 성격의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28일 동해상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양국 동맹간의 대잠수함전에 대한 전술과 작전능력 향상, 각종 대응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양국은 설명했다.

양국은 현재 구체적인 훈련 계획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전남도의회, 교육청 조례안 처리 오늘 임시회

전남도의회(의장 이호균)가 한 달간 표류했던 전남도교육청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20일 하루 열린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달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정된 뒤 꼭 1개월 만에 처리되는 셈이다.

앞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9명 중 5명의 교육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의회 운영을 주장하며,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표류했으며 지난 16일 상임위가 정상화돼 6건 조례중 5건이 통과되고 1건은 보류됐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또 10월 영암에서 개최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시의회 문화수도특위 2차회의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홍)는 19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 관련부서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문화수도 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수도 특위는 지난 7월20일 구성돼 1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위원장에 손재홍 의원, 간사에 전주연 의원, 위원으로는 홍인화·허문수·문상필·김보현·정병문·이은방·김영우·서정성·박인화·임동호 의원이 선임됐다.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퇴 촉구

정병문 광주시의원(민주·비례·사진)은 19일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 이사장은 임명때부터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장애에 대한 감수성은 물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마저 부족하다"며 "480만 장애인들의 꿈인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자리보전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단 이사장직은 구시대 정치인의 노후대책을 위한 자리로 전락됐다"며 "양 이사장은 '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제시한 31일까지 자진사퇴하고 정부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김지을 기자 cki@kwangju.co.kr